

# “72억 국제사기” vs “계약 이행중” 캠코 공방

〈3D 한미합작 법인〉

시민단체 “감사원 회수 불가능 판정, 사업 즉각 중단하라”  
광주시 “라이센스·물량확보 조건 최종계약…지켜봐 달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3차원 입체 영상 변환(3D 컨버팅)’ 한미합작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단체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국제적 사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반면, 광주시는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만큼 기술력을 확인할 때까지 좀 더 지켜봐 달라”며 맞서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자 21과 흥인회 광주시의원은 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3D컨버팅 한미 합작사업과 관련해 650만 달러(72억원) 사업의 의혹의 진상을 공개하고, 감사원이 부적정 판정을 내린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

장했다.

참여자 21 등은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 측 GCIC(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과 미국 K2사가 합작해 설립한 한미합작법인 ‘캠코’가 650만 달러의 거금을 사기당해 회수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며 “더구나 캠코는 이미 K2측에 승금한 650만 달러의 회수를 포기하고 K2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K2측과 최종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승금한 650만 달러를 선행투자금으로 차지하고 3D컨버팅 워크스테이션 100대 구입과 라이센스, 물량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최종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사기 운운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기 의혹을 일축했다.

광주시 측은 “현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중단하면 650만 달러의 손실로 볼 수 있겠지만 현재 최종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다”며 “특히 K2측이 3D컨버팅 기술과 물량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650만 달러의 선행투자는 손실이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기’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은 K2측이 계약이행을 내세워 GCIC 측을 고소함에 따라 맞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일 뿐, 이후 최종 협약 체결로 이를 모

두 취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2월 체결한 46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계약도 논란이다. 참여자 21 등은 “광주시가 650만 달러 손실이 발생한 이후 합작투자사업 대신 워크스테이션 장비 100대를 K2AM측으로부터 구매해 직접 3D 변환 작업에 나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며 “기술스태트가 겸임되면서 460만 달러 상당의 구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적절한 사업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광주시와 G-CIC 관계자들이 미국 LA 현지설사를 진행한 결과 기술력과 물량 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달 말 LA 기술테스트 결과 3D컨버팅 기술의 소프트웨어와 물량 마케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막대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지검 수사 착수

광주시가 추진 중인 ‘3차원 입체영상 변환(3D 컨버팅)’ 한미합작사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한미합작법인 캠코(GAMCO)를 상대로

한 감사결과를 넘겨받아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서류 검토가 끝난 뒤 캠코 등 사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질병·빚·실업…한국가구 57% ‘위기’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는 질병, 빚, 실업,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위기·취약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가족의 위기상 및 취약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1천733만 9000가구 가운데 57.86%가 질병, 빚, 실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사연이 지역·소득 기준으로 7천가구의 표본(한국복지페널)을

추출해 넘 설문조사 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한 것이다.

위기·취약 가구의 요인으로는 ‘가구원의 건강’이 23.07%로 가장 많았고, ‘부채·카드 빚’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22.3%,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4.74%로 뒤를 이었다.

또 ‘자녀 교육 혹은 행동’ 3.09%, ‘가구원간 관계’ 1.28%, ‘주거 문제’ 0.95%, ‘가구원의 암을 문제’ 0.61% 등도 요인이 됐다. 〈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 저소득층 자활기금 집행 저조

광주시와 전남도의 자활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15년 전 전국 16개 시·도의 자체에 총 250억원을 지원한 뒤 각자체가 추가로 조성해 자체 운영하는 기금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기금 보유액은 경기도가 5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70억), 서울(266억) 등의 순이었고 광주는 최하

위 수준인 73억원에 그쳤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5년간 조성한 자활기금이 총 3천698억원에 달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저조하다.

기금 손실에 대한 부담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자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운영의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금 집행액은 서울 35억원, 경기 33억원, 전남 29억원에 그쳤고 광주는 고작 2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정현애 부의장 “5·18기념행사위 상설화 필수”

광주시의회 정현애 부의장(민주·비례)은 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의 상설화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32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 다른 시·도 자자체의 무관심, 시민의 무관심과 참여자 저조 등이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5·18 행사 위 상설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은 또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한령, 6·10 항쟁 등은 규정돼 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누락된 상태”라며 “이는 무관심과 각종 지원 제외 등에 큰 원인이 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광주도시공사가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 12

일간이며, 임대조건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다가구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전세 임대주택은 최대 475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 혐의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접수한 뒤 대상자가 확정되면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 공고문 또는 전화 (062)600-6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 영광원전 4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는 원전 4호기(100만㎾급)에 대한 계획예방정비를 6일 오전 10시를 기해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계획예방정비는 40일간 이뤄져 오는 7월 15일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4호기는 지난해 3월 11일부터 이번까지(454일)까지 2주기 무고장 안전운전을 기록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kwangju.co.kr〉

##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첨단자이2차 균리생활시설

■ 주택공用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광주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 표본이며 드러난다면 드러난다.

7일에는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상가) 모집공고

■ 주제: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과 제2141호(2012.06.07)로 공급 신고필

■ 주체: 광주광역시 북구 신동면 542-10번지 일원 첨단자이2차 아파트 단지 내 균리생활시설

■ 면적: 556.2700m<sup>2</sup> (고분밀집형상가)

■ 주소: 492,43000 (고분밀집형상가)

■ 입구금지: 1개(가지하 1층 - 지하 2층 총 8평포)

■ 보호구: 보호구는